

붙임 1. 후보자별 질의 회신 여부

붙임 2. 핵발전 관련 질의 및 답변

붙임 3. 7대 과제 19개 항목별 동의 여부 답변

붙임 4. 7대 과제 19개 항목별 기타 의견

● 답변 입장 표기 중 △ = “(검토 중으로)예, 아니오로 답변드릴 수 없음”(이재명 후보) 혹은 “빈 칸”(윤석열 후보)으로 답변을 제출한 경우임.

[붙임 1]

2022탈핵대선연대 정책질의 답변

- 질의 회신 여부

정당명	후보자명	회신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회신
국민의힘	윤석열	회신
국민의당	안철수	미회신
정의당	심상정	회신
진보당	김재연	회신
기본소득당	오준호	회신
새로운물결	김동연	회신하되 미답변

2022탈핵대선연대 정책질의 답변

- 핵발전 관련 질의 및 답변

후보자명	정책질의	입장	기타의견
이재명	질의1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	신규건설하지 않고, 가동원전은 운영하며, 수명만료 시 폐쇄하는 원칙.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설계를 마친 상태로 경제선상에 있음. 향후 2030년 이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저렴해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
	질의2 SMR 연구개발 중단	△	SMR은 상용화된 기술이 없고 경제성도 주민 수용성 없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움.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R&D는 필요.
	질의3 원전 수명연장금지	동의	-
윤석열	질의1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부동의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자산이자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필요
	질의2 SMR 연구개발 중단	부동의	SMR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원전으로 보다 안전한 에너지 공급의 대안이며 원전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개발·활용하려 함
	질의3 원전 수명연장금지	부동의	원전 안정성은 원전수명이 아닌 원전 고유 안전 특성에 좌우됨
안철수	미회신		
심상정	질의1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동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금지를 공약함
	질의2 SMR 연구개발 중단	동의	SMR 기술개발 중단과 수출 금지를 공약함
	질의3 원전 수명연장금지	동의	수명연장 금지 및 2040년 탈핵을 공약함
김재연	질의1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동의	-
	질의2 SMR 연구개발 중단	동의	소형모듈원자로(SMR)을 포함한 모든 핵발전소의 퇴출이 필요함. 사고 위험성뿐 아니라. 기후위기 등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핵발전 폐로와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나아가야 함.
	질의3 원전 수명연장금지	동의	-
오준호	질의1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동의	-
	질의2 SMR 연구개발 중단	동의	많은 국가에서 SMR을 연구해왔으나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인해 제대로 상용화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생에너지 발전은 유동발전원인 반면 핵발전은 경직된 발전원이라 단일 전력사고에서,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속한 탈핵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질의3 원전 수명연장금지	동의	-
김동연	미답변		

2022탈핵대선연대 정책질의 답변

- 7대 과제 19개 항목별 동의 여부 답변

번호	7대 의제	19개 항목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재연	오준호	김동연
1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탈핵기본법 제정	△	부동의	미회신	동의	동의	동의	무응답
		원자력진흥법 폐지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2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 폐기 및 원점 재검토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재처리 금지 및 국내 처분 원칙, 관련 연구 및 예산 배정 금지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3	핵발전 규제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전환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	△	△		동의	동의	동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안전연구 중심으로 기능 전환	동의	△		동의	동의	동의	
		기체/액체 방사성물질 배출기준 및 규제 강화	동의	△		동의	동의	동의	
		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안전성 영향 평가 마련	동의	△		동의	동의	동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재대책 마련	동의	△		동의	동의	동의	
4	지역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지역에 원자력규제 권한 배분,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지역 및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		동의	동의	동의	
5	방사선 영향과 피해대책 마련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 확대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핵발전소 지역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핵발전소 인근 주민(갑상선암 공동소송 등) 건강영향조사 및 대책 마련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방사선 노동자 선량한도 인하 및 방사선 산재 인정 범위 확대, 피폭 노동자 관리 체계 마련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6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외교 활동 전개	동의	△		동의	동의	동의	
7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	신울진-신가평 500kV 초고압송전탑 건설 추진 중단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개정	동의	△		동의	동의	동의	
		밀양청도 등 송전탑 건설지역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동의	△		동의	동의	동의	

[붙임 4]

2022탈핵대선연대 정책질의 답변

- 7대 과제 19개 항목별 기타의견

7대 의제		19개 항목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재연	오준호	김동연
1.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탈핵기본법 제정	△	부동의	미회신	동의	동의	동의	무응답
		원자력진흥법 폐지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기타의견									
이재명	1-1	신규원전 건설하지 않고, 가동중인 원전은 사용기한 내에 안전하게 사용하며, 안전을 위해 수명만료된 원전은 폐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원전운영의 로드맵과 법제화에 대해 검토하겠음							
	1-2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고, 앞으로 원전해체 기술개발과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만큼 시대상황에 맞추어 검토하겠음							
윤석열	1-1	많은 IEA 가입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적정 비중의 원전을 활용해야 함							
	1-2								
심상정	1-1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을 공약함							
	1-2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음							
김재연	1-1	SMR과 연구로를 포함한 핵발전소의 탈핵을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민중이 주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상에 보장해야 함.							
	1-2	-							
오준호		-							

7대 의제	19개 항목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재연	오준호	김동연
4. 지역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지역에 원자력규제 권한 배분,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	부동의	미회신	동의	동의	동의	무응답
	지역 및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		동의	동의	동의	
기타의견									
이재명	4-1	원전주변 지역과 해당 주민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나라 전력공급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4-2								
윤석열	4-1	원자력규제는 전문영역으로 지역에 위임 곤란							
	4-2	이미 제도화되어 있음							
심상정	4-1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를 공약함							
	4-2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을 공약함							
김재연	4-1	'핵분열을 통한 발전'은 기업이나 정부 등의 주체만이 활용 가능한 기술인 만큼, 지역 및 시민사회가 참여와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한 제공이 보장되어야 함.							
	4-2								
오준호	-								

7대 의제	19개 항목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재연	오준호	김동연
5. 방사선 영향과 피해대책 마련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 확대		△	부동의	미회신	동의	동의	동의	무응답
	핵발전소 지역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핵발전소 인근 주민(갑상선암 공동소송 등) 건강영향조사 및 대책 마련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방사선 노동자 선량한도 인하 및 방사선 산재 인정 범위 확대, 피폭 노동자 관리 체계 마련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기타의견									
이재명	5-1	우리나라 원전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가 인접해 있어서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영향범위 등 해외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검토하겠음							
	5-2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하겠음							
	5-3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도시와 산업부문의 전력공급을 위해 방사능 유출로 인한 건강과 안전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만큼, 주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지 건강영향조사 등 주민안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5-4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피폭을 최소화하고, 피폭 노동자에게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윤석열	5-1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제 필요							
	5-2	기존 관련법에 따라 이행되고 있음							
	5-3								
	5-4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제 필요							
심상정	5-1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음							
	5-2								
	5-3	핵 취급시설 주변 아동 및 여성 갑상선 관련 질환 조사, 주민을 대상으로 인체 내 방사성물질 정기 검사를 공약함							
	5-4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음							
김재연	-								
오준호	-								

7대 의제		19개 항목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재연	오준호	김동연
6.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외교 활동 전개	동의	△	미회신	동의	동의	동의	무응답
기타의견									
이재명	6-1	경기도지사 시절, 태평양 연안의 인접국과 지방정부들에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제기구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공동대응으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윤석열	6-1	정치적 시각이 아니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외교 필요							
심상정	6-1	중국, 대만, 북한 등 태평양 인접국가와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및 주변국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조 전략을 공약함							
김재연		-							
오준호		-							

7대 의제		19개 항목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재연	오준호	김동연
7.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		신울진-신가평 500kV 초고압송전탑 건설 추진 중단	△	부동의		동의	동의	동의	무응답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개정	동의	△	미회신	동의	동의	동의	
		밀양청도 등 송전탑 건설지역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동의	△		동의	동의	동의	
기타의견									
이재명	7-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로 전환해야하며, 전력계통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7-2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송변전설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그에 마땅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7-3	도시와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위해 설치한 송전탑으로 인해 고통받은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음							
윤석열	7-1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설비임							
	7-2	기존의 보상기준, 보상내역과 방식 등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선행한 후, 관련 법령 일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진행							
	7-3	질의 세부내용을 보니 본 항목의 주제가 에너지 분야가 아니라 인권침해 분야로 보여짐.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필요.							
심상정	7-1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음							
	7-2								
	7-3								
김재연	7-1	이미 한국의 전력은 남아돌고 있음. 과대 추산된 전력과 초고압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7-2	-							
	7-3	-							
오준호		-							